

## 건설협회 시·도회장 회의

◇오인철대한건설협회강원



도회장은 14일  
오전 11시 한림  
용인CC 회의실  
에서 열리는 시·  
도회장 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

# 올 4차례 추경 67兆 중 SOC 비중 2%도 안돼

정부가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의 추경정예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무조건 파주기'식에 추경의 방점을 찍으면서 경제위기 극복이 멀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총 67조원 규모에 달하는 추경 중 경기 회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인 SOC(사회기반시설)의 비중이 채 2%에도 미치지 못한 탓에 정부가 역대급 추경을 편성하 고도 한국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는 올 들어 네 차례에 걸쳐 총 66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1차 추경은 지난 3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마스크 대란에 따른 마스크 공급,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과 경제적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1차 추경에 주로 반영됐다.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감염병 전문병원 2곳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1차 추경에 포함됐지만, 설계비 등 겨우 45억원에 불과했다.

2차 추경은 지난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원 포인트' 추경이었다. 정부는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고,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2차 추경의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SOC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정부는 일부 철도·도로 등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고, 입찰 일정 등을 감안해 추경에 SOC를 추가 반영하기는 커녕 본예산에서 오히려 8000억원가량 축소했다.

지난 7월 들어선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3차 추경을 35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3차 추경은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지

1차 때 45억, 2차 때 되레 삭감  
3차에도 패키지 처리 '푸대접'  
4차에선 '선심성 통신비' 논란  
"국난극복할 재정, 번지수 틀려  
경제 기여도 큰 SOC 투자확대  
고용·소득 등 선순환 만들어야"

만 위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10조원)에 대한 추경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경기 반등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나마 3차 추경에 선 경기보강 패키지로 한국판 뉴딜 예산을 담았는데, 이마저도 디지털 뉴딜의 SOC 디지털화에 5000억원, 그린 뉴딜 중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3000억원 등으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데다, 사업의 성격상 단기간에 직접적인 투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탓에 위기극복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4차 추경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는 타이틀로,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4차 추경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40만명을 대상으로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는 예산 9000억원을 반영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여당과 정부가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놓고 고민하다가 지지율이 하락하자 통신비 지원이라는 우회적인 경로로 보편 지급을 선택하면서 선심성 추경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경남기자 knp@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 추경, SOC 비중 저조

앞선 3차 추경에서 SOC 안전투자예산이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4차 추경의 1조원에 가까운 통신비 지원은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재정의 번지수가 틀려도 크게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례 없는 코로나19에 따른 네 번의 추경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SOC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고, 실물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